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전개요

청구인은 20○○. ○○. ○○.부터 ○○구 ○○○로○○○번안길 ○○ (○○동, ○층) 소재에서 “○○○○○○(○,○○○m²)” 라는 상호로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업소에서 20○○. ○○. ○○. ○○:○○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 ○개(유통기한 20○○. ○○. ○○.), ○○○ ○○ 1개(유통기한 20○○. ○○. ○○.), ○○ ○○○○ ○개(유통기한 20○○. ○○. ○○.), ○○ ○○○○ ○개(유통기한 20○○. ○○. ○○.), ○○○ ○○ ○개(유통기한 20○○. ○○. ○○.)】을 진열 보관하다 민원인 신고(신고일 : 20○○. ○. ○○.)로 업소를 방문한 피청구인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일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고, 20○○. ○○. ○○. 청구인이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자, 20○○. ○○. ○○.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일에 갈음한 과징금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매일 매장 내 진열상품을 점검하지 못한 과오는 인정하며 ① ○년간 업소를 운영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적이 없는 점, ② 처음으로 받

는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는 점, ③ 열심히 영업을 해도 직원월급, 임대료, 전기세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증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은 식품판매업자가 이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민원신고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이 피청구인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이 점검을 나갔을 때 진열상품으로 현장에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위반으로 처분한 사항이다.

청구인은 과징금 처분이 가혹함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바라고 있으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곳곳하게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는 대부분의 영업자와 행정처분을 엄숙히 이행하는 위반업소들을 볼 때,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제89조 [별표 23]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부터 〇〇구 〇〇〇로〇〇〇번안길 〇〇 (〇동, 〇층) 소재에서 “〇〇〇〇〇(〇,〇〇〇m²)” 라는 상호로 〇〇〇〇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이 사건 업소에서 20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〇〇 〇〇〇〇 〇개(유통기한 20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1개(유통기한 20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개(유통기한 20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개(유통기한 20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개(유통기한 20〇〇. 〇〇. 〇〇.)】을 진열 보관하다 민원인 신고(신고일 : 20〇〇. 〇〇. 〇〇.)로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피청구인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었다.

3) 위 2)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〇일 처분을 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를 20〇〇. 〇〇. 〇〇.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〇일에 갈음한 과징금 〇〇,〇〇〇,〇〇〇원을 부과하였다.

다. 판 단

1)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에 따르면 기타 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거나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그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기타식품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나,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 피청구인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시 확인서를 징구한 바 이 사건 위반사실이 명백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청구인의 경제상황에 비하여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진열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 유통되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었던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주로서 매장을 철저히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직접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나 법리오해의 위법함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